

大學生 異質化에 따른 教育的 對應*

鄭範謨 · 權鈞 · 崔炳敦
(翰林大學)

大學 인구의 팽창, 多人數化와 異質化는 하나의 사실이다. 소수의 정예를 다루던 옛 모습에 연연해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消散하거나 無意味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교육의 많은 문제는 이 사실을 우선 직시하고 난 다음, 그 사실의 意味를 분석해서 對應策을 마련함이 미흡한 데에서 연유된다고도 할 수 있다.

1. 序 論

大學 인구의 팽창, 多人數化와 異質化는 하나의 사실이다. 소수의 정예를 다루던 옛 모습에 연연해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消散하거나 無意味해질 수는 없다. 그리고 오늘 大學 교육의 많은 문제는 이 사실을 우선 직시하고 난 다음, 그 사실의 意味를 분석해서 對應策을 마련함이 미흡한 데에서 연유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大學은 변화하는 상황에 계속 대응하는 데에서 도리어 그 전래의 存在理由를 더 타당화하고 그 使命을 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大學은 그 자신을 빼 놓고는 무엇이든지 研究한다”는 비방의 말이 있다. 이제 대학은 그 자신도 연구하고 필요

한 變形을 이루어야 할 때일 것이다.

대학생의 多人數化 · 異質化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며, 그 교육적 對應策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 쉬운 예 몇 가지를 나열한다면, 교육철학적으로는 일반도적 엘리트층은 變形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정책적으로는 도리어 中等교육 다음의 ‘제3차 교육’인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며, 교육행정적으로는 행정 각급에서의 自律化는 불가피할 것이고, 교육재정적으로는 시설 확충, 교수진 증원 등 명백히 획기적인 증액이 있어야 할 것이 쉽게 推論된다. 교육 과정은 大學間에서도, 大學內에서도 多樣化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방법적으로는 이질적인 다

* 이 글은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 과제, “大學生 異質化에 따른 教育的 調整”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인수를 능히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 탐색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글은 이런 對應의 문제를 교육 哲學, 교육 政策, 교육 課程, 교육 方法으로 나누어 일반적으로 논의한다.

2. 教育哲學의 對應

大學生 인구가 급증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觀念의으로 갈등적인 견해가 대립할 수 있고, 그 갈등에서 어떤 選擇을 하며 어떤 綜合을 하느냐에 따라 대학교육의 정책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첫째 갈등은 多人數化에 대한 엘리트주의 대 대중주의의 갈등이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社會的 요청에 의해서 大學人口가 급증해 가기는 하되, 그것을 大學의 本然을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공공연하게 또는 은연중에 보는 엘리트主義 또는 貴族主義的인 견해가 한편에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政策家는 은연중 이른바 一流 대학에 정책적·재정적 支援을 더할 것이고 二, 三流 대학은 비교적 放棄하고 감독의 대상으로나 삼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教授는 그가 一流 대학에 있건 二, 三流 대학에 在職하고 있건, 기대에 미급하는 '低能學生'은 '學生 취급'하지 않고, 지도의 대상으로보다는 學習不能者로 무관심·무시·멸시·힐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政策의 실패와 教授의 실패를 많이 목격한다.

이에 반해서 또 한편에는 대학의 多人數化는 근본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려니와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대중주의적·民主主義的 견해가 있다. 부수되어야 할 여러 조건들이 수반되지 못해서 多人數化가 質 低下를 초래할 뿐, 多人數化 그 자체는 機會均等의 伸張이라는 견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견해다. "우리 대학엔 일류 대학에 처럼 天才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凡才, 鈍才도 대학에 다니는 동안 人生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준다면 그것으로 대학교육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어떤 인사의 말에 이 철학이 엿보인다. 앞의 예

와 對照的으로 이런 견해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일류건 이, 삼류건 모두 대학에 응분하고 공정한 지원이 도모될 것이고, 교수로서는 모든 학생을 적절한 方法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반드시 다 능히 學習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대학생의 急增이 사회 수요도 반영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면, 엘리트주의 교육철학은 좀더 대중주의 철학으로 전환되고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천재건, 둔재건 대학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이유 있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일이 되고, 不然이면 그 사실 자체가 무의미한 자체 도순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個人差에 대한 견해의 갈등이 있다. 우선, 같이 個人差라는 말을 써도 意見, 趣向, 哲學 등 이른바 非認知的 요인들에서의 개인차와 知能, 能力 등 認知的 요인들에서의 개인차는 달리 취급해야 할 정도로 그 對應에 관한 견해도 다르다. 즉, 한 견해는 非認知的 요인에서는 個人差를(예컨대 다른 의견, 다른 사상을) 蔑視시 또는 이단시하면서, 認知的 요인에서의 개인차는(예컨대 知能의 우열, 수학이나 英語 실력의 우열 등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도리어 은연중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다. 이에 반해서, 또 한 견해는 非認知的 요인에서는 도리어 넓은 개인차를 허용하고 장려하며, 認知的 요인에서는 그 개인차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될 수 있는 대로 上向的으로 縮小해야 하고 또 축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 즉, 思想과 趣向에서의 개인차는 넓게 장려하고, 知力, 知能에서의 개인차는 될 수 있는 대로 縮小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非認知的 요인, 예컨대 思想에서의 개인차를 蔑視시하는 것은 專制主義 철학과 상통하며 그것을 도리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것은 民主主義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認知的 요인, 예컨대 知力이나 學力에서의 개인차를 당연시하는 것은 貴族主義 철학, 따라서 支配者의 철학이라는 점에서 다시 專制主義 철학과 상통하며, 그것을 도리어 바람직하지 못한, 그래서 시정되어야 上向的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은 平等主義, 따라서 다시 民主主義 철학과 맥을 같이 한

다.

팽창하는 大學生 人口는 필연적으로 한편 趣向, 목적, 동기, 경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서 큰 다양각색의 개인차·이질성을 띄며, 또 한편 知力, 學力에서도 넓은 다양각색의 개인차·이질성을 띠게 된다. 이런 多人數化·大衆化의 추세를 능히 消化할 수 있는 철학은 역시 우선 非認知的 요인의 다양화·이질화·개인차를 도리어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Harvard 대학에서는 그 入學 전형에서 學力만 아니라 課外活動, 스포츠, 人物도 고려해서 평가하기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그 전형의 기본 원칙으로 '多様化'가 천명되어 있기로도 유명하다. 즉,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출신 州, 宗教, 人種, 빈부 階層, 취미, 특수 능력, 부친의 직업과 출신 학교를 고려해서 최대의 多様性이 확보되도록 전형한다(天城勲, 1981, pp.99~112).

그리고 認知的 요인에서는 그 개인차, 즉 優劣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強力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서만 받아들인 모든 학생이 목적하는 수준 이상으로 능히 성공적으로 學問할 수 있으며, 그 개인차는 上向의으로 줄이는 것이 이상이고, 줄이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下向의으로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또한 그 방향일 것이다. 이런 견해에는 순전히 철학적인 견해이기 보다는 能力의 不平等의 起源에 관한 심리학적 견해와 교수이론적 견해도 거기에 가세한다. 즉, 이른바 知能의 遺傳說 大 環境說의 견해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데, 위 견해는 이 후자와 제휴한다. 그리고 不實하고 허약한 教授方法이 도리어 遲進, 低能 학생을 만들어내고 개인차를 확대한다는 이론도 이와 제휴한다.

세계로 學問主義와 職業主義의 갈등이 있다. 즉, 대학교육을 주로 '學問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職業 준비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문제다. 이것은 옛날 大學의 發生의 동기에서부터 내포되어 왔던 갈등이다. 즉, 한편에 인간의 知識慾·眞理慾 또 한편에 사회의 專門職業人의 필요라는 두 발생 동기가 이에 관계된다. 한쪽에선 大學이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닦는 곳이 지 職業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그 견해에 따라 大學의 학과들을 설치하고, 그 敎育課程을 정하여, 그야말로 실제 교육이 '아카데미'한 운을 띤다. 여기에서는 卒業後 학생들의 취직이 대학이나 교수가 관심을 두거나 더구나 關心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교육 과정에서는 자연 순수 學問의인 科目과 系列이 강조되고, 實務的이고 訓練的인 과목은 적어진다. 전통적인 大學觀에는 이런 學問主義가 강했고 많은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學問主義의 취향과 향수가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근래 大學 인구의 맹렬한 팽창은 社會가 대학 졸업의 전문 직업인을 갑자기 많이 요구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職業主義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반드시 '職業的' 學科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學問的' 學科도 늘었다. 學問的 학과 졸업생도 職業人으로 요청되기도 했으며, 졸업생들이 학과와 똑같은 내용의 직업에만 취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 팽창의 주동 원인은 職業主義였다. 대학생 자신에게도 眞理探究라는 고상한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은 就職의 관심이 절실한 것이 보통이다. 이는 한때 대학생이 소수 정예였고 대부분 부유층의 子女였기에 就職 걱정은 뒷전에 머물러 있었으며, 주로 비교적 專攻 여하에 관계 없이 장차 社會의 官界·財界·文化界에서 엘리트의 地位를 거의 약속받은 것과 같은 처지에서 '한가로이', '여유 있게', '느긋하게' 순수 學問에 전심할 수 있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대학들은 한 전체로서는 學問主義나 職業主義를 다같이 추구할 도리밖에 없다. 그 중에 어떤 대학, 그리고 어떤 학과는 더 학문주의적 경향을, 어떤 대학과 어떤 학과는 더 직업주의적 경향을 취할 수는 있으나,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기울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문적인 학과라도 학생의 졸업 후의 就職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볼 때 敎育의 無責任일 수 있으며, 또 한편 아무리 직업적인 학과라도 그 전공의 學問的 성격이나 그것에 대한 순수 學究心의 필요가 輕視된다면 職業 준비의 충실도 자체에 차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一般의인 교육이 가장 職業的인 교육일 수 있다”는 말은 대학교육에도 해당되는 말일지도 모른다. 본래 두 가지 동기에서 출발한 大學이라는 제도가 긴 세월 産業化가 부진했기에 보다 學問的 동기에 더 충실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大學은 팽창하는 산업 사회의 요구에 직면하면서 그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생 지도에서 어떻게 학문주의와 직업주의의 어떤 生産的인 綜合을 이루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에서 자주 일어나는 갈등인 일반교육 대 전문교육, 교양과목 대 전공과목의 갈등도 학문주의 대 직업주의의 갈등과 비슷한 차원의 갈등임에 주의할 만하다.

이밖에도 대학생의 대중화·이질화에 따르는 교육철학적 대응과 조정의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셋을 주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그러나 여부간에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철학적 대응과 조정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문제다. 명백히 교육철학을 ‘바꾸는’ 일은 문교부가 대학에 指示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총장이 교수들에게 示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또는 대학들이 문교부 등 정책 입안자에 提示·要求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그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 대학교육의 정책, 운영, 교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각계 각층의 人士들의 協同이 마련되고 그런 협의, 토의, 숙고를 통해서 현실에 타당한 철학적 共感帶를 형성해 가는 방법뿐이다. 대학 교수들, 대학 행정자들, 정부 인사들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도, 사회 인사들도 제각기들 또는 같이 研究·協同하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는 정도에 따라서만 文藝的이 아닌 實質的인 교육 철학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교육철학 대응부터 우선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른 정책적·교육과정적·방법적 대응도 始動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다인수화와 이질화는 그저 문제만 야기되고 문제로서만 남아 있을 것이다.

3. 教育行·財政的 對應

대학생들이 多人數化하고 異質化해 간다는 사

실은 한 나라의 教育行·財政에나 한 대학의 교육행·제정에나 여러 적절한 대응책을 요구한다.

첫째로 多人數化는 명백히 相應할 教育財政的 增額을 요구할 것은 명백하다. 꼭 그렇게 주먹구구로 따질 것은 물론 아니겠으나, 대학생 인구가 倍가 되었으면 시설비, 경상비도 倍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리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은 아니었다. 급팽창에 따르지 못하는 教育財政 支援의 상황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1965년에서 1985년 동안 5년 단위로 대학에서 ‘교수당 학생 수’는 20, 19, 21, 28, 38 명으로 증가 ‘악화’된 셈이고, 같은 기간 ‘학생당 건물 면적’은 15, 14, 12, 11, 8로 축소 ‘악화’된 셈이다(韓國教育開發院, 1985). 협소한 시설, 다인수 학급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教育方法이 있다면 모르되, 이런 상황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 못되는 年度別 惡化 현상이다.

국제적 비교에서도 1980년에서 1986년 사이 각기 약간 다른 연도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대학에서의 ‘교수당 학생 수’는 한국이 38명인데 비해서 대만 21, 일본 11, 미국 14, 서독 8명이라는 對比이고, 학생당 대학 公教育費는 한국이 1,300 弗인데 비해서 대만 1,600 弗, 일본, 미국, 서독은 각기 6,280, 5,850, 4,600 弗이었다. 한국의 대학 사정이 외국 대학의 사정과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 자랑스럼지 못한 國際的 落後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돈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모자라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어떤 財源 포착의 創意性이 있어서 대학생 팽창으로 인한 한국 大學의 年度別 惡化, 國際的 落後를 극복해 가는 방향으로 財政 정책의 決斷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생의 대중화에 따르는 異質化, 各급 各층이 모여드는 현상에 대한 教育財政的 總體的 對應에 또하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이른바 一流, 二流라 하여 等差가 있는 대학에 대한 財政 配分의 문제다. 예컨대 1980년 같은 國立大學 A와 B의 國庫 예산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대비가 드러난다. 즉, 학생 1인당 운영비는 84만 원 대 32만 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뺀 ‘실질적인 운영비’인 물건비는 32만 원 대 6

만 원의 대비, 즉 5대 1의 대비다. 예산 항목에서 '국의 예비'가 A대학은 5천만 원, B대학은 0,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의료비'가 A대학은 4.6천만 원, B대학은 0이라는 대비를 발견한다(鄭範談, 1980). 같은 國立大學이기에 A대학이나 B대학이 교수 봉급은 같다. 그러나 학생들이 받는 '교육적 환경과 혜택'에는 사립대학과 같은 자체 조달 예산도 아닌 국고 예산에서 벌써 엄청난 隔差가 있다. 配分에서 이런 차등, 격차, 차별, 불형평을 어떻게 合理化할 수 있다는 것일까?

이런 예산 分配 行爲 뒤에는 앞서 말한 엘리트주의, 능력의 개인차를 운명시하는 계급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반론을 펴기 어려울 것이며 이 불형평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配分 정책이 서지 않는 한, 大學間 差는 점점 더해지고, 교육적 貧益貧 富益富를 부채질하고, 한국의 大學 전체로서의 학생들의 능력 個人差는 점점 더 下向的으로 넓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자주 논의되고 제안되는 私立大學에 대한 國庫 지원의 문제도 같은 '교육적 환경과 혜택'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재정 정책 대응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1985년 4년제 國·公立 대학과 私立 대학의 '교수당 학생 수'는 30대 39의 대비, 학생 1인당 건물 면적(m²) 9.7대 7.7의 대비, 학생 1인당 校地 면적(m²)은 61.0대 53.6의 대비로 私立 대학의 어려움의 단면을 보여준다. 私立 대학이라고 國庫支援 바깥에 머물게 할 시대는 지나간 것이 아닌가? 私立 대학을 교육적 貧益貧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반드시 國益도 아닐 것이다. 국제적인 知識 戰爭, 頭腦戰爭 속에서 私立 대학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이미 깨달은 다른 나라의 예도 배울 만하다.

둘째로 大學間 差를 行政的으로 어떻게 對應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大學間 差를 늘리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 줄이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던 그저 無心히 보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서 그동안 이른바 대학 입시의 先試驗後志願 제도는 어느 의도에서였는지는 모르나 大學間 差를 늘리는 데

에는 '성공'했고, 그것을 줄이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그것은 어느 論者 말대로 모든 대학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序列짓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一流, 二流, 三流의 확연한 差等만 아니라, 一流 안에서도 A, B, C 대학의 차등도 확대되고 확연해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아주 적어진 셈이다.

이렇게 大學間 差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대학 학과 지망에서 適性 여부보다는 예비고사 성적으로 대학, 학과를 선택하고 권장하는 학생들의 폐단과 교사들의 폐습도 부채질해서 不適性志願의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그것은 결국 다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엘리트주의의 소산이며, 대학교육 대중화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대학생에게 疏外感과 違和感을 줄 것이고, 일부 대학생에게 엉뚱한 選民意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88년도 대학생 입학 전형이 先志願後試驗制로 전환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大學間의 이런 等差 서열이 있는 것이 자기 한 等差 속에 비교적 同質的인 집단이 생기기에 가르치기 위해서 더 有利할 것이라고 強辯할런지 모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예컨대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 학생들을 能力別로 班 편성해서 가르치는 경우의 결과에서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별 반 편성의 '실험'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분반해도 한 반 속에 동질이라고 보기엔 아직도 너무 넓은 여러 가지 개인차가 殘存하는 법이며, 반과 반 사이에 심한 反目과 시기가 생기고, 能力下位 반 학생은 전보다 더 학습을 포기하며, 교사도 이들을 학습 무능자로 보아 열의를 가지기보다는 적당히 가르쳐 버린다는 결과를 자주 보여준다. 個人差에 대응하는 가장 有效한 길은 결국 보기에 동질이건 이질이건간에 어떤 모양으로 個別化된 수업 또는 個別化된 수업에 가까운 수업일 뿐이다. 入試 제도만 아니라, 大學間 差를 助長하는 모든 정책은 그만큼 문제를 내포한다.

세째로 多人數化에 대한 行政的 대처의 문제로 分權化·自律化의 문제가 있다. 본디 大學의 自律은 자유분방해야 할 첨단적인 교육과 연구라는

그 본然에의 임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팽창해서 多量化·多様化·多岐化함에 따라 分權 自律의 필요는 점점 커진다. Alvin Toffler(1980, p. 451)도 '決定負荷量'이라는 개념을 동원한다. 한 社會에는 그 활동에서 이거나 저거나를 決定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두를 決定負荷量이라고 할 때, 그 社會가 多量·多様·多岐化, 그리고 가속적으로 變化함에 따라 그 결정부하량도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增大해 간다. 이렇게 急增大해 가는 결정부하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中央集權的 체제가 감당할 수 있으나, 어느 시점부터 그 많은 결정의 문제, 전문적이고 다양하고 특수한 문제, 변화하고 新出하는 문제들을 빨리 適切하게 賃情에 맞게 決定 짓기에는 中央集權 체제의 힘에 겨워진다. 이 시점을 넘어서도 중앙집권 체제를 밀고 가면 부적절한 결정, 때 늦은 결정, 실정에 맞지 않는 결정, 부작용이 많은 결정, 그래서 朝令暮改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들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社會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예컨대 경제계에서 수출 100억 불 때와 수출 1,000억 불 때와는 그 결정부하량은 10 배 훨씬 더 넘게 늘어나며 그만큼 中央 관서가 이를 다 다루기 어렵게 된다.

한국의 대학도 그 量과 多様性에 있어 매년 팽창한다. 1970년 대학 수 98, 대학생 수 24만, 교원 수 8,700 명이었던 때와 1985년 대학 수 231, 대학생 수 126만, 교원 수 33,000 명인 때와는 그 決定負荷量은 엄청나게 다르다. 아마도 그 몇 백 배가 되었을 결정부하량의 중요한 많은 부분을 계속 문교부가 다루기는 힘에 겨워질 수밖에 없고, 이를 그래도 강행한다면 '부적절한, 때 늦은, 실정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많은, 그래서 조령모개할' 결정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간 여러 가지 연유로 한국의 대학들은 강한 중앙집권적인 통제·지시·시달을 받아 왔다. 이것은 대학의 본然에 비추어서도 팽창에 따른 결정부하량의 効率的인 처리를 위해서도 대폭 分權化·自律化의 방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또한 근자에 政治風向의 전환으로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번 들어온 權力을 실질적으로 내놓기란 어디에서나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리고 自律은 자율대로 응당한 지혜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기에 分權化·自律化의 길은 간단히 낙관할 일은 아니다.

네째로 대학 팽창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行政 문제는 대학 팽창에 대한 洞察 있는 計劃性의 문제다. 1955년에서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5개 연도별로 앞 5년보다 대학생 수가 팽창한 비율을 보면, 1960년에 1955년의 1.19 배, 1965년에 1.30 배, 1970년에 1.25 배, 1975년에 1.4 배, 그리고 1980년에 일약 2.4 배, 1985년에 다시 2.2 배가 되어 126만에 이르렀다. 이런 倍增 비율로서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60년대, '70년대는 大學 팽창의 高校 졸업 人口 증가에 오는 壓力과 '70년대 중반부터 기업체들이 스카우트戰까지 벌이게 될 정도로 심각해진 高級人力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大學教育 '亡國論'의 여파로 팽창의 목을 지나치게 즐겼다. 그러다가 그 압력과 요청에 못이겨 1978년 갑자기 大學定員을 늘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것이 1980년에 일약 2.4 배로 연결되었다. 그런 '돌연적'인 팽창이 몰고 오는 教育적 차질은 여러 가지로 너무 크다. 그리고 다시 1980년에 '卒業定員制'가 또 정책적으로 발안되어 이미 늘어난 定員의 30%를 더 돌연적으로 팽창시킨 결과가 2.2 배라는 증가로 나타났다. 5년에 비해서 2.4 배, 2.2 배로 느는 팽창은 아마도 세계에 그 유례가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어느 해는 서울의 大學定員을 갑자기 늘리지 않고 동결하고, 어느 해는 또 풀고 하는 경우도 경험했다.

大學人口 팽창에 대한 政策의 起伏이 이렇듯 너무 심한 상황은 이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문교부의 어떤 '부서에서건 또는 어떤 위원회에서건 急増하건 漸増하건 大學 팽창에 대한 좀더 未來透視의이며 突然性 없이 安定性 있는 팽창, 그리고 부수해야 할 재정과 기타 조정 문제도 고려에 넣어 팽창에 따르는 進통과 차질을 더 연에 '예방'하는 팽창의 計劃을 세우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高度技術社會에로의 전망에서나 한국의 전통적인 教育熱로 보나 그리고 50%

이상 취학률의 미국의 예로 보나, 한국 大學人口 팽창의 압력과 요청은 어떤 돌발사가 있기 전에는 좀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늘되 안정성 있게 교육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늘어 가야 할 것이다.

4. 教育課程의 對應

大學의 多人數化·大衆化·異質化는 대학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도 전통적인 것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그 發想에서부터 대학은 專門職業的 관심과 學問的 관심의 두 동기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법률가, 의사, 성직자를 기르기 위해서(더 정확하게는 ‘기르기 위하여’가 아니라 ‘되기 위하여’라 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이들 대학은 예컨대 학생들이 교수를 고용하는 등 학생이 대학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Bologna 대학은 法學, Salerno 대학은 醫學, Paris 대학은 神學을 주로 專攻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또 한편 Oxford 대학, Paris 대학에서는 동시에 그리스 文化에 연유하는 自由人의 敎養으로서 필요하다고 여겨진 이른바 ‘三敎科’(trivium: 문법, 논리학, 수사학)와 ‘四敎科’(quadrivium: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가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등장했다. 이것이 自由敎養科目, 人文科目, 文理科目 등으로 번역되는 ‘liberal arts and sciences’의 시초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후 이들 교양 과목 또는 문리 과목은 보다 자유롭게 확대 해석되어 오늘의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의 여러 ‘學問的’인 과목들로 발전한 셈이다. 그리고 한편 專門職業人의 ‘專攻’은 시대의 産業 구조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또 대학교육의 世俗化·大衆化에 따라 法科, 醫科, 神學科만 아니라 農科, 工科, 商科…등으로 확대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觀光學科, 衣類學科 등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 人文敎育 대 職業敎育, 또는 敎養敎育 대 專攻敎育의 두 뿌리는 오늘날도 자주 대학 교육과정에서 여러 논쟁과 갈등의 뿌리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大學의 多人數化·大衆化·異質化라는 견지에서도 이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위 敎育哲學的 大處에서도 논의한 학문주의(또는 인문주의) 대 직업주의의 문제는 그대로 여기의 논의에 해당된다. 엄청난 大衆化의 물결 속에서도 대학은 학문주의, 인문주의를 基幹으로 해야 하고 직업주의를 배척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학의 職業訓練處로서의 기능은 도리어 팽대해 가는 추세다. 이것은 대학의 대중화·다인수화가 産業社會의 필요에 대응하는 추세라는 점에서도 불가피하다. 아마도 있어야 할 方向은 인문주의와 직업주의의 어떤 절충, 상보, 종합일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對應의 문제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과의 ‘命名’ 또는 설치에서부터 신중해야 할 것이다. 學科名 여하가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런지를 크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生物學科’라고 하는 것과 ‘植物學科’라고 하는 것과 큰 차가 생긴다. 그렇다고 생물학과에서 식물을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식물학과에서 동물을 전혀 안 가르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름 때문에 교육과정 구성의 출발점 전체가 달라진다. 그리고 문제는 과연 4년제 대학과정에서 세분된 식물학과, 동물학과 같은 것이 적합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세분은 ‘깊이’ 파들어 가야 할 大學院 과정, 또는 반대로 ‘좁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2년제 專門大學에 적합한 것이냐 하는 것과 같은 문제로서 學科를 구상하는 대학 자체도 인가하는 문교부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만하다. 기실 定員 增員의 방편으로 다분히 即興의인 그러나 언뜻 時代 요청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 特殊細分된 학과들이 한국의 대학에는 많다. 그래서 도리어 生産的이 못되는 지나친 職業主義가 결과된다. 이런 특수 세분된 學科는 [그야말로 4년을 ‘채우려면’ 도리어 대학원 또는 반대로 전문대학에 들어가야 마땅한 과목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敎育內容이 졸업 후 과연 오늘날 職場에서 또는 대학원 연수에서 더 유리하나 불리하나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增員하려면 學科를 분리·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생물학과 그 자체를 증원하고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細部專攻으로 배당하는 것이 더 타당한 增員策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의 대학 全體에 多樣性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동시에 어떤 統一性을 띠게 하는 문제다. 4년제 대학생 100萬 명을 같은 틀에 집어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2년제 전문대학 50萬 명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대학 중에는 지극히 學究的이고 '상아탑'적인 대학도 있음직하고 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각기 다른 정도의 직업주의를 추구하는 대학도 있음직하고 또 있어야 한다. 전문대학은 그 기치부터 일단은 직업주의적이지만, 여기에도 이런 多樣性이 허용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두의 多樣 속의 統一性은 다시 대학 發想 동기에 되돌아가 알고자 하는 人間의 欲望과 知識慾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대학은 따라서 아무리 異質的인 多人數라도 비중의 차는 있을망정 '人文 교육', '自由 교육', '訓練 받은 사람' 아닌 '教育 받은 사람'의 특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부분이 없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직업교육의 부분일 수도 있다.

둘째, 대학 교육과정에서 자주 논쟁점이 되는 문제에 敎養 과목과 專攻 과목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앞서 논한 人文 교육 대 職業 교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그러나 꼭 같지는 않다. 人文 과목, 예컨대 국문학과 수학은 교양 과목도 되고 전공 과목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人文 주의는 교양 과목에 더 비중을 두려하고, 職業 주의는 전공 과목에 더 비중을 두려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에서의 교양 대 전공 과목의 論爭에서 알아둘 만한 한 歷史的 배경이 있다. 그것은 더구나 여기에서 초점인 대학교육의 대중화·다인수화와 관계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들어오기 전 구라파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貴族의 아들들이 가는 곳이었다. 귀족의 아들들은 公共의 初等 학교에는 학교가 있어도 가지 않았고, 집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배웠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귀족 아들만 가는 '고등학교'(영국의 public school, 프랑스의 lycee, 독일의 gymnasium)에 갔다. 이 '고등학교'는 철저한 大學 준비 학교였고, 그 교육과정은 거의 완전히 人文的이고 敎養 과목적이었다. 이렇게 少數 엘리트

들이 철저한 교양적 교육을 받은 다음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라파의 대학에서는 敎養科目이 거의 없었거나 그 비중이 아주 적었다. 그러나 구라파에서도 初·中等 교육이 보편화되고, 대학이 大衆化된 지금은 물론 사정이 달라졌다.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그 建國 때부터 貴族主義는 없었기에 대학은 처음부터 大衆化의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普遍化된 초등교육과 이어서 보편화된 중등교육에 이어지는 대중화된 대학교육 체제였다. 그래서 少數精銳 아닌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多數가 다 모여 든 곳이었다. 그래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교양을 補充하는 교양과정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의 大衆化는 오늘의 여러 州立大學의 前身인 '農工大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職業的인 대학이었다. 그래서 다시 人間教育的인 補充을 위해서도 人文的인 교양교육의 강조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대학의 大衆化·職業化, 大學生의 多人數化·異質化가 이를 긴요하게 만든 것이다.

더 말할 나위없이 한국의 初·中·高等教育의 사정은 그 보편성, 진학 경로, 대중화에 있어서 미국의 사정과 비슷하다. 한국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명 국가에서 초·중등교육의 보편화와 이에 이어지는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미국의 역사적 사정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 정도에 따라 대학에서 敎養課程의 비중은 커지고, 교양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개선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만드느냐는 더 큰 관심사가 된다. 그 외에도 知識이 급속히 팽창하는 社會, 高度技術의 社會, 多樣·多岐·專門化하는 社會에 견주어 본 교양과정의 필요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한국 대학의 교양과정과 그 운영에는 대학의 대중화, 대학생의 다인수화·이질화에 비주어서 강조되고 시정되어야 할 점이 많다.

세째, 자주 논쟁점이 되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비율 문제도 그 다른 論據도 있겠으나 대학생의 다인수화·이질화와 무관하지 않다. 다인수화·이질화는 선택 과목의 비율이 높을 것을 요구한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즉, 교양과정에서건 전공과정에서건 그 基本的이고 中核的인

最少 必須의 과목들은 있어야 하되, 선택 과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이질적인 목적, 동기, 취향, 적성,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多樣한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成長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사람들이 자주 염려하듯이 선택을 허용하면 학생들이 과목들을 系統性 있게 선택하지 못하며, 또 어떤 학생들은 쉬운 과목, 評點 잘 주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선택 과목의 논거는 약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杞憂라고 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大勢는 아니다. 궁극 자신의 成長에 무관심하며, 어떤 成就를 바라지 않는 학생은 드물다. 스스로의 成長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약간 어렵다고 피하고, 재미도 보람도 못 느끼는 것을 ‘찾아가서’ 등록할 학생은 드물다. 더구나 과목 選擇을 그저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목들의 자세한 內容 설명도 있고, 선택에서 교수와의 相談, 그의 助言이 있다면 이런 염려는 더구나 기우다. 그리고 이런 科目 내용의 설명 文冊, 그리고 教授와의 相談은 실은 선택 과목 제도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科目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연장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택해서 공부의 진로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專攻 하나만을 이수하는 主專攻制만 아니라 主專攻과 副專攻을 이수하는 主·副專攻制, 두 전공을 동등하게 이수하는 複數專攻制도 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일정한 전공을 事前에 정함이 없이 자기 趣味와 스스로가 세운 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이 學科, 저 學科의 과목들을 이수하는 ‘自由專攻制’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리어 어떤 創意的이고 독창적인 組合의 과목 이수 형태가 거기에서 창출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비제, 다인수화되고 이질화된 대학생 집단에게는 교양과정에서건 전공과정에서건 正統的인 과목들만 아니라 免除과목, 矯正과목, 深化과목, 生活과목, 課外과목 등의 非正統的인 과목들이 풍부하게 설치되어 있을 만하다. 異質的인 집단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각종 事前 能力의 우열이 벌어지고 學習 속도의 差가 심하며 개인

적인 관심이나 흥미에도 개인 차가 넓게 마련이다. 따라서 不足하고 不振한 학생을 위한 각종 矯正과목, 월등한 학생을 위한 각종 免除과목과 深化과목, 제각기의 개인적인 문제와 관심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生活과목, 課外과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事前英語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은 정통인 교양영어「英語 I」을 이수하지 않고, 교정·보충적인「英語 A」를 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英語 I」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매한가지로「英語 I」을 이수 후 많이 떨어지는 학생은 다시「英語 L」을 듣게 할 수도 있다. 이때「英語 L」,「英語 A」의 학점은 교양도 전공도 아닌 선택 과목으로 간주하면 된다.

어떤 事前 테스트에서 英語가 아주 기준 이상으로 월등한 학생은「英語 I」이 아니라 英文科의 다른 科目, 경우에 따라서 大學院 과목도 이수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이것을 深化과목이라 이름지을 수 있다. 이때「英語 I」은 이수 ‘면제’하고 그 深化과목 학점을 인정할 수도 있고, 深化과목의 이수료「英語 I」의 학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가령 교양도 전공도 아닌 자유 선택 과목으로「結婚과 家庭」,「人間關係와 感受性訓練」,「油畫實習 I」,「단소와 대금 실습」,「스키實習」등이 학점을 인정하면서 설치된다면 이는 生活과목이라고 부르고, 학점 없이 운영되면 課外과목이라고 불러 볼 수 있다. 이런 과목이 非知的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과목으로 설치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所定の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最少 必須를 이수해 내는 학생들의 이런 生活의 豊富化를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대학의 기능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며, 더구나 生活의 배경과 취향이 다양하게 이질적인 학생들에게엔 적합한 自我實現의 한 보람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5. 教育方法的 對應

위에서 논한 다인수화·이질화에 대한 교육철학적·교육정책적·교육과정적 對應은 실제엔 그리 쉽지가 않다. ‘철학’을 바꾸는 일엔 상당한

‘충격’이 필요하고,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개선도 법이나 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해서 쉽지 않다. 그러나 教育方法的 對應은 교수나 대학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지가 그래도 가장 쉬운 對應 영역이다.

대학생의 多人數化·異質化가 교육 방법 또는 授業方法 여하에 던지는 문제와 의의에는 실은 그리 새로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授業方法은 그 자체가 이질화된 다인수를 교육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사 1인, 학생 1인의 個人授業, 個別授業의 상황에서는 授業方法에 대한 유별난 배려 없이도 대개의 교사가 잘 가르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個別授業 상황에서 2차 방정식을 가르친다고 할 때, 우선 $(X+2)(X+3)$ 이라고 써 보았는데, 아이가 미간을 찌프리고 가우똥하면 교사는 왜 그러느냐 물을 것이다(事前 能力確認). 그것이 $(X+2)$ 와 $(X+3)$ 을 곱하기 하는 표현임을 몰라서 그랬다면 이것을 먼저 가르쳐 줄 일이다(事前 補充學習). 아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앞을 가며 가르칠 個人 교사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엔 가능한 대로 그 아이도 같이 생각하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게 하면서(적극적 參與), 이것이 X^2+5X+6 과 같다는 것을 써 가며 그림을 그리며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고(端緒提示), 그 다음엔 거의 반드시 비슷한 다른 문제를 주어서 한 번 해 보라 그럴 것이다(評價, 理解確認). 이때 잘 했으면 “잘 했어!” “맞았어!” 칭찬해 주고(強化, 피드백) 다음으로 가되, 잘못했으면 대개 교사는 반드시 “그게 아니야, 틀렸어!”라고 한 다음(피드백), “이렇게 해야 돼”라고 고쳐 줄 것이고(矯正學習, 補充學習), 다시 해 보라고 하고 이해를 확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야 다음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授業行動들은 授業方法을 배우거나 그것에 유의하지 않아도 個別授業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행동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의 학습에 꼭 필요한 수업 행동들이 학생 두 명 이상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순간부터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여 30, 50, 100 명에 이르면 이들 행동 중 ‘提示’만 남고, 다른 事前 능력 확인, 事前 보충 학습, 참여, 평

가, 이해 확인, 강화, 교정 학습을 위한 수업 행동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 때문에 이런 集團 수업 상황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이 무엇이나가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수업 방법의 문제는 실은 옛날처럼 少數精銳를 가르칠 때나 지금처럼 多數異質을 가르칠 때나 다 集團 수업 상황이지가 언제나 있는 문제다. 다만 그 정도에서 오늘의 집단이 보다 다수 이질적이기에 좀더 심각해진 것 뿐이다.

그 對應의 첫째로 아마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 이전에 대학에서도 이제는 授業方法的 改善이 있어야 한다는 共同認識일 것이다. 이것이 개개인 교수로서나 교수 전체로서나 별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측이나 외부에서 아무리 그 필요를 강조해도 소용 없다. 가르치는 일, 授業活動은 물론 아주 個性的·私人的인 활동이다. 거기엔 한 교수의 個人的인 學識, 識見, 性格, 라이프 스타일이 작용하는 個性的이고 藝術的이기도 한 활동임에는 틀림없다. 그 개성적인 영역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침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또 한편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授業活動엔 어떤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연구·논의·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共同的 改善의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앞에 언급한 事前 確認, 參與, 효과적 提示, 強化, 矯正 등이 그 예다. 가령 개성적 수업 활동의 비중이 7이고, 공통적인 부분이 3이라고 하더라도 그 3의 改善은 큰 學習成果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은 실제 비중은 반대로 3대 7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공동적인 개선 노력은 더 필요한 셈이 된다.

대학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대학은 모든 것을 연구하지만 그 자신만은 연구하지 않는다”는 속언처럼 스스로의 授業方法 개선의 여지와 필요에 대한 공동 인식의 부족일 것이며, 그 전환의 계기로서 필요한 것은 이런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教授들의 잦은 모임과 이에 대한 行政的 지도력과 지원일 것이다. 둘째로 學習觀의 문제가 있다. 즉, 흔히 있는 공부란 머리 좋은 아이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머리 나쁜 아이는 아무리 돌보아 주어도 공부

못한다는 ‘固定的 학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授業方法 개선 노력에 대한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해 보아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수업 방법에 크게 관심이 없는 데에는 이런 學習觀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學習이란 조건만 맞게 해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머리가 나쁘다는 學習不振 학생은 근본적으로 불행한 學習 歷史에 의한 ‘累積된 缺陷’ 때문에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이며, 그 缺陷만 교정·시정해 주면 언제나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力動的’ 학습관이 있다. 불행한 學習 歷史 속에서, 예컨대 자기 능력에 부치는 일을 ‘강제로’ 배워야 하고, 못 알아 듣는 ‘설명’을 들어야 하고, ‘強化’도 없고 ‘피드백’도 없으며, ‘確認·評價’도 없고, 어떻게 하다 잘못 안 것, 모르게 된 것, 부족하게 된 것을 보충해서 矯正·是正해줄 없이 사정 없이 앞으로 공부를 진행해 가는 상황에서는 많은 학생에게 결손이 생기게 마련이다. ‘實力’의 결손만 아니라 도대체 공부라면 시들해지는 動機의 결손, ‘나는 落伍者’라는 自我概念의 결손 등 보다 무서운 결손들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누적된 결함’을 교정·시정·보충만 해 주면 능히 배울 수 있다는 學習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학습관에서는 교수법 개선은 중대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문제가 된다. 그것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學習不振에서 ‘救濟’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는 학생의 학습 부진은 학생의 失敗가 아니라 교수의 실패를 의미한다. 두 학습관 다 그 주장의 정도에 따라 極端的인 주장이 될 수 있다. 실제 상황은 그 어느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 그 중간쯤의 학습관으로도 많은 학생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로 모든 教育方法的 대응에서 여러 가지 원칙과 구상이 가능하겠지만, 그 典例의인 理想은 앞에서도 비쳤듯이 個別授業의 상황이라는 것에 유념할 만하다. 즉, 가능한한 개별 수업 상황을 많이 創出하는 노력과 개별 수업 상황에 작용하는 授業行動을 集團授業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接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그

對應의 主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能力이 비슷한 두 집단에 가르치되, 한 쪽은 보통과 같은 한 교사가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集團 수업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은 한 학생에 한 교사를 붙여서 가르치는 個別授業 상황에서 가르칠 경우, 後者의 學習 成果는 실로 엄청나다. 個別授業을 받은 학생 집단의 成績 평균이 集團授業을 받은 집단 성적 분포의 上位 5%에 해당하는 점수와 같다고 한다(Bloom, 1984, pp.4~16). 즉, 100 명이라면 個別授業에서 약 50 등이 集團授業에서 약 2 등의 성적과 같다는 것이다. 그만큼 個別授業 상황에서 성적 분포가 上向한다.

그렇다고 아무리 부자 학교라도 모든 과목의 모든 공부에 교사와 학생을 일 대 일로 짝을 지어 가르칠 수는 없다. 學校 교육은 불가부득이 集團 교육 상황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個別授業의 상황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正課 시간 중에도 그런 기회를 만들고, 正課 시간 외에도 個別面談 지도 등 개별 수업의 상황을 마련할 수 있다. 個別 수업이 큰 成果를 내는 연유가 個別授業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앞에서 언급한 사전 능력 확인, 보충 학습, 적극적 참여, 강화, 평가, 확인, 교정 학습 등의 수업 행동에 있는 것이고, 그런 수업 행동을 集團 수업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代行할 수 있는 機制를 많이 案出해 내는 정도에 따라 學習 成果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중 矯正과목, 課外과목, 深化과목을 운영하는 것과 前 學力교사, 診斷교사, 評價교사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실시하고 분석해서 矯正과목의 필요성과 특별 지도의 필요를 밝혀 내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네제로 학생의 다인수화·이질화에 대한 교육 방법상의 대응으로 각종 현대 情報器機를 활용할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큰 方向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중대 視聽器機라고 불렀던 幻燈機, 오버헤드 프로젝트, 오페이크 프로젝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映寫機,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디스크, 텔레비전 등이 들어간다. 아주 간단한 슬라이드 프로젝트나 오버헤

드 프로젝터의 사용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授業에서의 '提示力'을 아주 강화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활용될 만한 경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正常的인 학생은 물론 學習 缺陷이 있는 학생에게는 言語, 수자, 기호같은 '象徴的' 提示보다는 그림, 圖表, 實寫와 같은 '映像的'·'具體的' 제시가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근래 대형 영상 TV, 레이저 비디오 디스크 등 情報, 映像 傳達器機 방면의 새로운 발명들이 눈부시게 빠르다. 반드시 새로운 器機에 꼭 매료되거나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을 教育方法上的 利點은 놓치지 말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여타 대학에 '시청각 교실', '교육매체 센터' 등이 있으나, 교수에 의한 실제 활용 정도는 설치·투자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情報器機의 대종은 電算機, 컴퓨터인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고, 教育方法上 이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日新月進하고 있고, 강력한 教育方法을 바라는 노력에 컴퓨터가 무관할 수가 없다. 이미 CAI, CMI, CBI 등의 略字名詞가 나온 지 오래다. 이들은 각기 '컴퓨터 보조 수업'(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컴퓨터 관리 수업'(computer managed instruction), '컴퓨터 의거 수업'(computer based instruction)의 略字다.

컴퓨터는 대학의 현대 교육과 여러 모양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 현대 대학은 거의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사용 및 이용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졸업 후 就職하는 거의 모든 직장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고 학자로 나가도 연구에 컴퓨터가 필요하며 개인 생활에까지도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전산개론'이 모든 학생에게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다(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대학 교수 자신들은 컴퓨터 이용을 모르고 있거나 업무를 못내고 있는 것은 한 아이러니다).

둘째, 大學行政에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강의 시간표 작성, 등록 사무 처리, 교무

성적 처리, 학생 기록……등 많은 行政事務에서 컴퓨터가 사용된다. 이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자연 大學總長,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각 학과장도 물론 컴퓨터를 事務室에 두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세째, 컴퓨터 활용은 컴퓨터의 機能이 專攻 학문의 교육과 연구에 어떤 특수한 便宜와 利點을 제공하는지를 탐색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일이다. 쉬운 예로 數學 공부, 통계 공부에서 컴퓨터는 아주 利器인 것은 명백하다. 하바드대학에서는 한국의 族譜를 진산화해서 歷史的 사건과 관련짓는 연구를 하고 있다. 音波의 振動을 中媒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의 圖表 기능에 연결시켜 그것을 視覺的인 波動으로 옮겨 '音波'의 교육을 如實하게 한다. 대학의 각 學科에서 이 방법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위 셋은 대학생의 多人數化·異質化에 따른 교육 방법의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다. 그것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대학 운영 전반에 관계하는 문제다. 教育方法上 직접 관계되는 컴퓨터 활용으로서 CAI, CMI가 있다. CBI는 CAI와 CMI를 합하여 통칭한 용어다. 이들은 방대한 情報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으로 유독히 多人數 상황, 異質化 상황에서 個別化 교육, 個別化 처리 등 여러 가지 個別化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有用하다. CAI란 예컨대 「통계학 概論」이라는 강의를 일부 또는 전부를 교수가 강의하지 않고 강의 내용의 提示, 연습 문제, 答의 正誤, 그것에 따른 다음 내용의 提示, 종합 시험……등을 체계적으로 고안해서 프로그램화한 것을 컴퓨터에 入力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학생 혼자서 자기의 學習 速度에 맞추어 공부해 나가는 授業 체제를 말한다. CMI는 학생들의 學習에 관한 모든 情報, 예컨대 적성 검사, 모든 이수 과목과 그 학점 기록, 각종 시험 점수, 그런 시험의 부분 검사 점수……를 收錄해서 일정한 體系에 따라 분석하여 한 학생, 한 학생이 더 이수해야 할 과목과 보충해야 할 과목 또는 과목 부분, 해야 할 활동 등의 處方을 내리는 體制를 말한다. CAI와 CMI는 컴퓨터 出現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授業을 個別化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힘을 충

분히 活用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한국에서도 大學人口는 더 늘어갈 것이며 더 多人數化하고 異質化해 갈 것이다. 이에 대한 教育철학, 教育 行· 재정, 教育과정, 教育 방법상의 재조정은 아마도 계속적인 문제타야 할런지도 모른다. *

<參 考 文 獻>

鄭範謨, "大學校 運營과 財政에 따른 意見" (리발

포 논문), 1980.

天城勲, 大學의 入口와 出口, Simul 出版會, 1981.
韓國教育開發院, 韓國의 教育指標(교육정보자료 J-M85-1), 한국교육개발원, 1985.

Bloom, B.S., "The 2 sigma problem: The search for methods of group instruction as effective as one-to-one tutoring", *Educational Researcher*, 13 : 6, June/July 1984, pp.4~16.

Toffler, A., *The third wave*, W. Morrow, 1980.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37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活動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教育 과정이나 교수·학습 活動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方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教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8년 11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會 (전화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